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한일 초계기 갈등과 대한민국 안보

일시 2019. 2. 13 (수) 오후2시

장소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

주최  바른사회
FOR A BETTER SOCIETY

■ ————— 순 서 ————— ■

■ 사 회

- 이 영 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 주제발표

- 배 정 호 (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 박 휘 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교수)
- 남 광 규 (매봉통일연구소장)

■ 질의·응답

■ 폐 회



■ 목 차 ■

■ 주제발표

한일 초계기 갈등과 일본정치 9

- 배 정 호 (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한일 초계기 갈등과 한미일 안보협력 15

- 박 휘 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한일 간 초계기 갈등 현황과 군사적 함의 23

- 남 광 규 (매봉통일연구소장)



■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 배 정 호 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 박 휘 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교수
- 남 광 규 매봉통일연구소장

한일 초계기 갈등과 일본정치

배 정 호
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I. 문제제기

1. 한일 초계기 갈등의 쟁점은 무엇인가?
2. 왜, 예전과 다르게 한일 군사적 갈등이 점화되고 심화되었는가?
3. 아베 총리가 2019년의 4월 지방선거, 7월 참의원 선거를 위해 보수층 결집과 지지율 상승에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한일 초계기 갈등이 심화되었는가?

II. 갈등의 발단 및 쟁점

1. 광개토대왕함과 P-1 해상초계기의 조우와 갈등의 발단
 - 2018년 12월 20일 15시경, 독도 동북방 100마일(160km)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외곽에서 북한 표류어선의 조난 작업을 하던 한국의 구축함 광개토대왕함(3500t급 구축함)과 일본의 P-1 해상초계기가 조우함.
 - 광개토대왕함이 접근하던 일본의 P-1 해상초계기에 대해 대응한 것과 관련, 이와야 타케시 방위상이 “예측할 수 없는 군사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고,
 - 일본 외무성 관료들은 “우호국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하면서 레이더·위협비행의 논란이 제기되고, 갈등이 발생함.
- * 이후 2019년 1월에 접어들어 재차 일본 해상초계기기의 저고도 근접 비행이 3차례 연속 나타나면서 치킨 게임 양상의 한일 초계기 갈등이 심화됨.

<그림 1> 광개토대왕함과 해상초계기의 조우 상황(2018.12.20.)



<출처> 연합뉴스 2018.12.24.

2. 광개토대왕함과 일본의 P-1 해상초계기의 레이더 조준의 갈등과 쟁점

< 표1 >

한국	일본
영상 촬영용 광학카메라 운용 - 광학카메라의 작동시에 붙어 있던 사격관제레이더도 함께 작동되었으나, 그 과정 중에 일체의 전파 방사는 없었음. - 일본 해상 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운용한 사실은 없음. * 일본이 제시한 신호음은 가공된 소리며 실체가 없는 기계음이라고 반박.	사격관제레이더의 전파 방사 - 일본 초계기가 한국측 사격관제레이더 (STIR-180)가 방사한 전파에 접촉됨. * 한국 광개토대왕함 레이더의 18초 신호음을 근거로 공개(2019.1.21.)
한일EEZ 중간수역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내
통신 강도가 너무 미약하고 잡음이 심해서 우리가 인지했던 것은 ‘코리아 코스트(해경)’라는 단어만을 인지했음. - 당시 주변에 해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해경함을 호출하는 것으로 인지했음.	일본측의 교신 시도에 한국측 무응답.

III. 갈등의 증폭과 심화

1. 일본측의 지속적 항의

- ‘일본측의 항의-> 한국측 설명-> 일본측의 반박->한국측의 재설명’이 이루어지고, 한일간 실무간 화상회의가 2018년 12월 27일 상호 오해를 풀기위해 개최되었으나, 상호 입장의 차이만 확인한 채 결렬됨.
 - 2019년 1월 14일 싱가포르에서 한일 실무자 대면협의를 가졌지만, 갈등의 해소는 고사하고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헤어짐.
- 한일간 실무간 화상회의 다음날인 2018년 12월 28일, 일본 방위성이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한국어, 일본어, 영어 3개 언어로 제작하여 방위성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재함으로써, 한일 양국간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지게 됨.
- 이에 한국 국방부도 2019년 1월 4일 반박 동영상을 공표함.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6개 국어로 제작
- 아베 총리는 2019년 1월 1일 아사히신문(朝日新聞)과의 인터뷰에서 “사격관제레이더를 조준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라며 한국에 “재발 방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고 촉구함.

2. 일본 방위성의 최종견해 발표

- 일본은 방위성 홈페이지에 ‘한국 레이더 조사(照射)에 관한 최종견해’ 발표
 - “협의를 계속은 이미 곤란하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하며, 한국과 더 이상 협의를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
 - 레이더 갈등의 새로운 증거로 ‘화기(火器)관제용 레이더 탐지음’과 ‘수색용레이더 탐지음’ 2개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재.
- 한국 국방부는 “우리가 요구한 탐지일시, 방위각, 전자파의 특성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이라며 유감 표명.

3. 3차례의 연이은 저고도 위협비행

- 2019년 1월에 접어들어 일본 해상초계기가 1월 18일, 22일, 23일 연이어 저고도 위협비행을 함.
 - 특히, 1월 23일의 일본 해상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
(대조영함 우현 통과시 고도 60m)
- 한국 국방부는 1월 24일 일본 해상초계기가 한국 해군 함정위로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고 발표하며, 대조영함을 향해 일본 해상초계기가 근접 위협비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함.
- 이에 일본 방위상은 1월 24일, 위협이 되는 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기존 처럼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서 적법한 운용을 하였고 주장함.
 - 1월 25일, 가나가와현 아쓰기 기지의 해상자위대의 초계기부대를 방문하여 격려.

< 표2 >

일시	장소	한국 함정	일본 초계기	거리/고도
1.18 (11:39경)	울산 동남방 83Km	울곡이이함 (구축함)	P-1	1.8km/60-70m
1.22 (14:23경)	제주 동남방 95km	노적봉함 (상륙함)	P-3	3.6km/30-40m
1.23 (14:03경)	이어도 서남방 96km	대조영함 (구축함)	P-1	540m/60-70m

4. 한국 국방부의 강경 대응과 ‘냉각기’

-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와야 타케시 방위상의 아쓰기 기지의 해상자위대의 초계기부대 방문(1.25) 다음날, 2019년 1월 26일 조종사 복장으로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

한일 초계기 갈등과 대한민국 안보

일본 해상초계기의 초저고도·초근접 위협비행에 우리군의 대응수칙대로 적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함.

- ‘교전불사’시사

○ 이에 일본의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1월 29일 “한국과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한일 군사교류의 맞춰소와 급랭, 갈등의 악순환

: 한국; 1함대사령관의 금년 2월로 예정된 일본 방문 무기한 연기

일본; 금년 4월 하순 다국적 훈련에 참가가 예정되었던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이즈모’의 한국 파견 취소 검토

IV. 갈등의 정치외교적 배경과 후유증

○ 한일 초계기 갈등이 일본측의 문제제기-> 한국측 설명-> 일본측의 반박-> 한국측의 재설명으로 이어지며, 예년과 다르게 군사적 수준을 넘어 정치외교 적 차원으로 비화되고 있으며 그 후유증도 나타나고 있음.

1. 갈등의 정치외교적 배경

○ 한일 초계기 갈등의 증폭은 직접적으로 문제인 정부의 등장 이후,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발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의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불신 심화와 한일관계의 악화, 그리고 일본 군함의 욱일기 게양 논란과 불참에 따른 일본 해상자위대의 상한 감정 등에 기인하는 것임.

○ 그리고 중국 견제와 미일동맹의 강화 그에 따른 일본의 전략적 역할의 확대 및 일본의 국제적 위상 제고, 한일관계에서 일본의 주도권 확보 등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 아울러, 금년 4월 통일지방선거 및 7월에 참의원선거의 승리를 위한 지지층 결집 및 지지율 제고를 위한 국내정치의 전략적 배경도 내재되어 있음.

* 인도태평양전략과 미일의 전략적 협력 / 미·일·호 연합훈련 / 미·일·인 연합훈련

- 한국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참가 보류

* 7월에 참의원선거

- 개헌을 위해 연립여당의 2/3 확보 중요성

; 일본 국민들 개헌에는 냉담

* 초계기 갈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상승에서 1월 25-27일 실시된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3%로 지난해 12월의 조사 때보다 6% 상승하였고,

- 여론조사 응답자의 62%는 한일 초계기 갈등과 관련, “한국에 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답함.

2. 갈등의 정치외교적 후유증

- 한일관계에서 일본의 공세적 자세로의 전환과 주도권 확보 추구, 금년 4월 통일지방선거 및 7월에 참의원선거의 승리를 위한 지지층 결집 및 지지율 제고를 위한 국내 정치의 전략적 배경 등으로 인하여
 - 한일 초계기 갈등의 후유증으로 일본의 안보협력대상에서 한국 2 -> 5위, 아베 총리의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 및 한일관계 무언급, 일본 외교에서 한국 위상의 재조정 등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 일본의 안보협력대상국 순위에서 과거 미국에 이어 2위였는데, 2018년 12월 각의에서 채택된 ‘방위대강’(2018.12)에서는 미국-호주-인도-동남아세아에 이어 5위로 밀려남.

*아베 총리는 2019년 1월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문제를 거론하면서도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음.

- 미·중·러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

=> 한일초계기 갈등의 해결을 위한 한일 군사협력채널은 거의 가동되지 못함.

=> 한일 양자간 해결이 아닌 국제여론에 호소, 국제재판 등 국제사회에서 해결 시도를 주장(오노데라 중의원 의원, 전 방위상)

한일 초계기 갈등과 한미일 안보협력

박 휘 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교수

1. 들어가며

외교가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우리 편은 늘리거나 강화하고, 적 편은 줄이거나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외교는 거꾸로 가고 있다. 우리 편인 미국과는 방위비분담 문제를 둘러싸고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있고, 일본과는 일본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방사 여부를 둘러싸고 감정싸움을 하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이 시기에 어른스럽지 못한 치기(稚氣)가 한국의 외교를 지배하고 있다.

특히 한일관계의 경우 2018년 12월 20일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북한 어선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근처를 비행하던 일본 초계기에 사격통제용 추적레이더(STIR)를 방사하였다고 일본이 항의하였는데, 실무선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면 될 것이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소규모 군사적 문제가 대규모 국가적 문제로 제어 없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에 대립이 격화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정부는 아무런 처리노력을 경주하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이 미국이나 일본과 감정적 대립을 벌일 상황이라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은 수소폭탄을 포함한 수십개의 핵무기를 개발하여 한국을 위협하고 있고, ‘비핵화’를 명분으로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고 있으나 그 결말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의 대륙간탄도탄(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제거를 미국과 북한이 거래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게 되면 한국은 북핵 위협 하에서 굴종하거나 아니면 핵공격을 받아서 국토가 초토화되는 상황에 처해야 한다. 정부의 치기가 불안한 근본적인 이유이다.

2. 한일간 안보협력의 필요성

미국과 한국은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일본과 안보협력만 증진하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협력관계가 완성되고, 그 결과로 북방의 북한, 중국, 러시아의 결속에 대비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외교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필수적이고, 이를 통하여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를 구축해야 한다.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해질수록 이 필요성은 커진다. 우선, 공통위협, 상호이익, 신뢰성의 측면에서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 간에 북한의 핵위협이라는 공통 위협이 적지 않다. 양국은 모두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이면서 북한 핵미사일의 사정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모든 미사일을 핵무기를 탑재하여 한국을 타격할 수 있고, 북한이 야전에 배치하고 있는 사정거리가 1,300km인 노동미사일이나 사정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은 핵무기를 탑재하여 일본을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이 개발될 경우 한일 간 북한 핵위협의 공통성과 절박성은 더욱 크질 것이다. 중국의 팽창주의적 정책과 군사력 증강도 한일 양국에게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지만, 한국은 북한관리나 통일에 관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필요성은 아직은 낮다고 봐야 한다.

둘째, 한국이 일본과 안보협력을 추진할 경우 기대되는 이익의 보완성은 작지 않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우수한 해군력과 공군력, 정보력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대규모 육군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일 간의 동맹은 한미일 동맹이 되기 때문에 한국, 미국, 일본 군대 간의 상호보완성이 무척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긴밀한 안보협력관계는 북한의 재래식 또는 핵도발은 물론이고, 중국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셋째, 문제는 한일 양국이 갖는 상호 신뢰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동맹을 구실로 일본이 한반도에 진출하여 과거 역사를 재현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감정적 갈등으로 인하여 한일 양 국민 간의 신뢰성도 높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을 함축적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 평가

안보협력 판단 요소	필요성 평가결과		비고
	현재	미래	
공통 안보위협	중	강	-단기: 북한의 핵위협 강화 -장기: 북한 핵위협의 지속 강화, 중국의 팽창주의적 정책 강화
상호 안보이익	상	중	-단기: 북한 핵위협 대응에 관한 공동대응 -장기: 중국위협 대응의 강도를 두고 한일 약국 견해차 발생 가능
신뢰성	중	중	-단기: 한일 모두 건전한 법치국가, 미국의 보장 -장기: 일본의 한반도 침탈 우려

공통 안보위협, 상호 안보이익, 신뢰성 측면에서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평가해보면 필요성이 낮은 편은 아니고, 시간이 흐를수록 커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위협이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고, 중국이 공세적 팽창주의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미국도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한일 양국의 부정적 국민여론인데, 2013년부터 2016년 까지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의 언론NPO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 국민의 경우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2013년의 75.5%, 2014년 70.9%, 2015년의 72.5%, 2016년에는 51.1%

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인상도 2013년의 37.35%, 2014년 54.4%, 2015년의 52.45%, 2016년에는 44.5%로 극단적으로 나빠지는 않는 상태이다.¹⁾ 따라서 정부와 양국의 여론지도층이 노력할 경우 국민여론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3. 한미동맹의 실태

냉전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은 한국의 후견국가로서 안보지원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주한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하면서, 1968년부터 양국 국방장관 간의 안보협의회의(SCM)를 매년 개최하였고, 그 때마다 공동성명에서 “핵우산” 제공을 명시하였다. 북한군의 기습적 남침을 차단하고자 수백발에 이르는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기도 하였다. 지금도 미국은 SCM 공동성명에서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고 있고, 한국에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다양한 전략자산을 동원하여 이행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안보지원 태도는 달라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여 당선되었고, 선거유세 과정은 물론이고 당선 이후에도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요구되는 만큼 방위비분담을 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2015년 10월 12일 공화당 대통령 후보 출마자로서 트럼프는 미국 뉴햄프셔에서 열린 행사에서 1조원 정도에 달하는 한국의 방위비분담을 “푼돈”(peanut)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²⁾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장에서 “도발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한미연합연습을 일방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고,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³⁾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2월 24일 트위터를 통하여 미국이 부자인 우방국의 군대의 보조금을 지불해온 격이라고 불만을 토로하였고, 26일 이라크의 미군부대를 방문해서는 미군이 더 이상 국제사회의 ‘호구(sucker)’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성급하다고 볼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주한미군의 조기 철수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2월 매티스(James Mattis) 국방장관이 사임하면서까지 반대했음에도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2,000명의 미군을 철수시킨다고 결정하였고,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14,000명 중에도 절반 정도가 철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⁴⁾ 북한의 핵위협이 미 본토를 위협할 정도이거나 한국이 현재처럼 방위비분담에 계속 인색하다고 판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즉흥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누구도 배제할 수 없다. 인계철선인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것은 유사시 미군 개입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고, 그것은 한미동맹의 형식화 또는 종결로

1)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제6회 한일 국민상호인식조사 주요결과 요약,”

<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68> (검색일: 2019년 2월 1일).

2) 노효동, “트럼프 “한국 분담 방위비는 푼돈”...한국계 추정 대학생 반박,” 『연합뉴스』(2015. 10. 13).

3) 임민혁, “트럼프, CVID(완전, 검증 가능,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빼놓고 ‘한미훈련 중단,’” 『조선일보』(2018. 6. 13), p. A1.

4) Gordon Lubold and Jessica Donati, “Trump Orders Big Troop Reduction in Afghanistan,” The Wall Street Journal, January 28, 2019.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미래는 불안정해지고 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부정적인 한미동맹 정책을 완화시키거나 긍정적으로 전환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현 정부는 북한의 연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하여 반대해오던 입장을 바꿔서 2017년 9월 사드 전체 포대를 배치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아직도 지역의 반대여론을 제대로 무마하지 못하여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 2017년 10월 31일 외교장관은 사드 문제로 인한 한중관계 개선을 위하여 “3불(不)” 즉 사드 추가 배치, 미국과의 탄도미사일방어체제 협력, 한미일 군사협력 등을 자제하겠다는 의도를 표명하기까지 하였다.⁵⁾ 미국과 함께 북한을 압박하기보다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대북정책의 주안을 두고 있고, 이를 위하여 다양한 사안에서 미국 경제제재의 예외를 요청하기도 했다.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서는 미군에게 책임을 더욱 강화시키고자 노력해야하는 상황임에도 2018년 10월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미국과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하여 전시 작전통제권의 조속히 환수할 것과 그 이후에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연합사령관을 한국군이 담당한다는 데 합의하였다.⁶⁾ 또한 2019년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 문제에 관하여 1조원을 넘기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일각에서는 이로 인한 미군 철수의 가능성까지 우려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⁷⁾

4. 일본에 대한 과제

한일관계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상당부분은 양국이 국내적 요소에 매몰된 결과라는 점에서 한국의 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내적 요소보다 국제적 요소를 중시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역사인식 등 과거사를 잊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사의 비중을 좀 낮추고 국익에 필요한 사항은 과감히 협조해 나가야 한다.”⁸⁾ 1960년대 김종필과 박태준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일 정치인들의 네트워크처럼 한국의 정치인과 단체들은 일본의 상대역들과 접촉 및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양국의 현안을 적극적으로 타결해 나가야할 것이다. 최근에는 정치지도자들이 오히려 국민감정을 악화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도층의 반성이 필요하고, 이들은 단기적이거나 인기영합주의적 정책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이 양국 간의 협력을 위한 방도를 모색할 경우 그에 따라 국민여론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양국 지식인, 그리고 언론도 함께 노력해야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을 자제시키는 데 있어서 근본적이면서 어려운 과제는 식민지 역사에 대한 정리이다. 한국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하여 더욱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일본은 이미 충분히 사과했다는 인식이라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동일한 사과에 대해서도 양국 국민들이 느끼는 인식의 차이는 매우 높다. 양국 정치지도자들은 과거사에 대한 사과나 보상의 적절한 수준을

5) 김진방, “정부, 中 '3불약속' 표현에 공식항의…中, '약속→입장표명' 수정,” 『연합뉴스』(2017. 11. 2). p. 1.

6) 국방부, “한미안보협력회의-공동성명,”

http://www.mnd.go.kr/user/boardList.action?boardId=L_43915&siteId=mnd&id=mnd_010704010000
(검색일: 2019. 1. 10).

7) 배재성, “한미 방위비 협상 난항…주한미군 철수 우려 증폭,” 『중앙일보』(2019. 1. 29).

8) 유명환, “한일 관계의 현주소와 해법의 모색,” 『신아세아』, 제21권 1호(2014), p. 23.

합의하고, 이에 대하여 국회와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을 일본이 수용할 경우 한국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결책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가급적 과거사에 대한 언급을 줄이면서 시간의 자연치유력에 기대하는 방법도 있다.

국민감정의 변화에 노력하면서 한국은 시급한 사안별로 일본과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에 관한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교환할 필요가 있고,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논의의 내용도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탄도미사일방어(BMD: Ballistic Missile Defense)의 경우 한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면 일본을 공격하는 핵미사일을 사전에 요격할 수 있고, 일본은 미국과 함께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한미일 삼국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할 경우 요격효과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아직은 한국에게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선택사항일 수 있지만, 북핵 위협이 더욱 고도화될 경우에는 필수조치가 될 수 있다. 북한의 핵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일본과 협력해서라도 억제 또는 방어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미국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구비함으로써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이 불안해질 경우 한국을 도와줄 국가는 일본밖에 없을 수도 있다. 국민감정보다는 국가생존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한국의 정부와 국민들은 미국이 유사시 한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면 일본의 기지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이 공고해져야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유기적으로 병립될 수 있고, 유사시 미국의 효과적인 한반도 지원이 보장될 것이다.

5. 미국에 대한 과제

정부는 현재의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이 확실해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핵무기 폐기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 본토에 핵무기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경우 미국은 한미동맹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더욱 중요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의 종료도 우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주라는 감정보다는 용미(用美)라는 이성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북한의 핵무기 폐기나 북핵 대응을 위한 미국과의 협의 및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미국으로서는 한국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수록 북핵 해결에 있어서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북한과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의 이해는 결정적으로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긴밀한 협의와 공조는 미국의 방기(放棄, abandonment)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다. 정부는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전략, 조치에 관한 사항을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면서 대신에 미국의 그것들을 적시에 통보해주도록 요청하거나 상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북핵 대응에 관한 공조체제가 없을 경우 북핵 폐기도 한미동맹도 모두 위험해진다는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국과 경제적 협력은 지속하되 안보 차원에서는 한미동맹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 무역분쟁을 진행하고 있고,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중국이 방해한다는 인식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긴밀한 한중관계는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할 수 있다. 북핵 폐기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이전까지 한국은 중국과는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 하에 경제·사회·문화적 협력에 충실하고, 안보 및 국방분야에서의 협력은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한중관계와 한미관계에 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할 경우 중국도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한중관계의 실질적인 발전이 가능할 수 있다.

한국군은 북한의 핵억제 및 방어태세를 위한 미군과의 긴밀한 협력에도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 국방부와 합참은 미 국방부 및 합참과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eterrence Strategy Committee)를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확장억제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발전 및 점검하고,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맞춤형 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이 개념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4D” 즉 “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방어(Defend)”를 구현할 수 있는 세부계획과 능력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선제타격(Kill Chain),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의 개념과 계획이 “4D”계획과 일관성을 갖도록 조정하고,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도발할 경우에도 한미 양국군은 긴밀하게 협의하며, 가급적이면 연합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은 투표와 국민여론을 통하여 국가정책의 형성과 시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효과적인 관리나 강화에는 국민들의 협조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국민들은 현재의 북핵 위협으로 인하여 한미동맹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졌다는 인식 하에 당분간 자주보다는 동맹을 중요시할 필요가 있고, 한미동맹과 현안 문제 등에 관한 선동이나 루머에 현혹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분담 증대 요구에 대하여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용미 차원에서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접근해야 하고, 정부가 타결할 경우 결과를 지지 또는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일부 정치세력들은 그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반미감정을 자극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냉철한 한미동맹관이 다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5. 나가며

한국은 현재 수백만의 사상은 물론이고 민족의 역사를 단절할 수도 있는 심각한 북핵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하고, 그에 미국이 핵미사일로 보복한다면 남북한 모두는 불모지대로 변모할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요소라면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할 상황이고, 그 중 하나가 한일 안보협력임은 분명하다. 이제 우리는 한일관계에 관하여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를 들면,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일본과는 제대로 협력하지 않을 것인가?

일부 인사들은 한국이 일본과 안보협력을 추진할 경우 1910-1945년 사이에 있었던 강점의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 수많은 침략을 받았으면서도 한국은 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일본과 갈등관계를 유지하면 역사 반복을 막을 수 있는가? 역사적으로 더욱 많은 사례와 오랜 기간을

통하여 한국을 침범한 중국과는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일본과는 안보협력을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과거 강점의 역사 반복이 우려될수록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충돌의 상황 자체를 예방해야 할 것이고, 한미일 3개국 간 협력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이 일본의 팽창을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북핵 위협이라는 공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 안보협력을 증진하며, 이를 통하여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하여 한미일 3국은 필요시 북핵에 대한 선제타격, 탄도미사일 방어, 응징보복을 위한 계획을 토의하고, 역할분담도 검토하며, 이러한 노력을 북한에게 전달함으로써 억제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다른 분야에 대한 협력은 최소한으로만 유지하더라도 북핵 대응에 관해서는 긴밀한 한일협력 나아가 한·미·일 협력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태에서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사항을 존재하기 어렵다. 북한의 핵무기를 고려한 남북한 군사력의 규모를 비교한 사례를 참고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남북한 군사력 비교(핵무기 포함)

국가명	투1. 국방비(억\$)		산1.현역군인(천명)		산2.예비역(만명)		산3. 전차(대)	
	금액	상대치	인원	상대치	인원	상대치	숫자	상대치
남한	325	700	625	100	310	100	2,514	100
북한	102	217	1,280	205	762	246	3,500	139
구분	산4.대포(문)		산5.전투함(척)		산6.잠수함(척)		산7. 전투기(대)	
	수량	상대치	수량	상대치	수량	상대치	수량	상대치
남한	11,067	100	35	100	24	100	541	100
북한	21,100	190	40	114	35	140	545	101
총계	총계1 단순지수		총계 지수/2		총계3 지수 x 핵무기 승수효과			
남한	1400		700		840(700 x 1.2)			
북한	1,352		676		946.4(676 x 1.4)			

* 출처: 박휘락,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의 북한 핵무기 영향 판단: 시론적 분석,”『의정논총』, 제13권 2호(2018), p. 242.

<표 2>를 보면 북한의 핵무기와 미국의 확장억제를 함께 고려할 경우 남북한의 군사력 비율은 100 : 113(840 : 945.4)으로 남한이 열세하다. 여기에 미국의 확장억제를 제외해버리면 100 : 135(700 : 946.4)로 더욱 열세해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기습공격을 감행하면 100 : 190(840 : 1,589)으로 한국이 2배 정도 열세해진다. 북핵 위협으로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이 이와 같이 붕괴되고 있고, 미국의 확장억제가 없으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 군대가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현 정부가 한미동맹을 그다지 중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한미동맹이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수십

년에 걸쳐 피로 맺어온 국민동맹인 한미동맹을 현 정부가 망치고 난 이후에 비판을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동맹의 유지는 국민들의 자위권 행사일 수 있다. 북한이 그들의 비핵화 즉 핵무기 폐기를 위한 아무런 의미있는 조치도 강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약화될 경우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핵위협에 굴종하거나 북한의 핵공격을 각오하고 싸워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이 될 경우 자위권을 발동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국민들은 자위권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미 군사력의 파견을 보증하는 인계철선(trip wire)인 주한미군을 유지시키며, 미국의 핵우산이 확실히 제공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2019년 1월 30일 “대한민국수호 예비역장성단” 출범식에서 주창되었듯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을 국민들이 모금하여 채워주는 것도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이 큰 액수도 아니다. 2018년에 9.602억 원을 제공하였는데, 이것은 2019년 정부예산인 469조 6000억원에 대입하면 0.2%이고, 국방예산 46조 6,971억 원에 대입하면 2%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 수십조원의 가치를 갖는 주한미군과 그를 인계철선으로 삼아서 대규모 미 증원군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절대로 비싼 비용이 아니다. 미국은 현재 10억달러(현재의 환율로는 1조 1,200억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9,999억원까지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단지 1,200억원 정도 때문에 정부가 국민동맹인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국민들의 성금이라도 거두어 지원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이로써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해질수록 한미동맹, 한일 안보협력,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는 한국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유일한 생존방책일 가능성이 높다. 자존심보다는 지혜, 감정보다는 이성에 더욱 의존해야할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한미동맹과 한일 안보협력을 지혜롭게 강화하여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포함한 모든 전쟁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없다.

한일 간 초계기 갈등 현황과 군사적 합의

남 광 규
매봉통일연구소장

1. 초계기 갈등 현황

작년 12월 20일 한국 해군의 북한 선박 구조과정에서 한일 해군 간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 대응과 관련한 논쟁이 불거져 확대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경색되었던 한일관계가 더욱 얼어붙고 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당시 북한 선박을 구조하던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일본의 P-1초계기를 향해 공격용 추적레이더를 쏘았다고 주장하며 이후 전격적으로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우리 해군은 오히려 일본이 저공위협비행을 하면서 광개토대왕함에 도발했다고 반박하면서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을 공개했다. 일본의 주장에 대해 해군은 광개토대왕함이 표류중인 북한 어선을 탐색하기 위한 레이더를 일본의 초계기에 가동한 건 맞지만 사격통제 레이더 가동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반면에 초계기에는 통상 공대함미사일 등 무장이 탑재되어 있어 선박에 근접 저공비행할 경우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일본 측에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나 일본 방위성은 한국의 해군 함정이 먼저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해 위협했으며 일본의 초계기가 한국 해군의 구축함 상공을 저공비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전에도 이와 같은 사례들은 자주 있었으나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한일 간 군사적 움직임이 이번처럼 정치적, 군사적 갈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다. 흔히 있었던 일이었으나 한일 군사 당국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을 서로 공개하면서 상대방이 위협을 가했다고 반발하면서 초계기 갈등은 심각한 상황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한일 군사당국이 1월 14일 제3국인 싱가포르에서 한일 장성급회의를 열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하고 성과 없이 끝났다. 한일 장성급회의에서 한국 해군은 일본 초계기의 위협 저공비행이 국제법적 조항과 사례에 있어 부당한 조치였음을 설명하고 일본이 애초 문제제기의 근거로 삼았던 정확한 레이더정보의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레이더 공개에 응하지 않았다. 이처럼 한일 군사당국회의에서도 아무런 결과와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서 한일 간 초계기 갈등은 장기화되고 있다.

1월 28일 정경두 국방장관은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일본 해상초계기의 초저고도, 초근접 위협비행에 대해 우리 군의 대응수칙대로 적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항공점퍼를 입고 해작사 지휘통제실에서 상황보고를 받은 정경두 장관은 일본 해상초계기가 우리 함정을 위협한 것에 대해 우방국에 대한 심대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의 언급은 1월 25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초계기가 배치된 가나가와현 아쓰기기지를 방문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이었는데 이와

야 방위상도 해상자위대 조종사가 입는 점퍼 차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국방 수장이 ‘순시엔 순시로, 점퍼엔 점퍼로’ 맞붙 대응을 펼친 셈이다. 한일 해군 함대사령관은 매년 상대국을 방문하며 교류해왔는데, 예정되었던 우리 함대사령관의 일본 방문이 사실상 보류되었다.

특히 이번 초계기 갈등은 강제징용 배상문제로 가뜩이나 악화일로로 가는 한일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신일철주금측에 강제징용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같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배상문제는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일제의 강제징용 피해자측은 배상과 관련한 협의에 나서지 않으면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압류 등을 통해 강제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개최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처럼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이어 초계기 갈등까지 나오면서 한일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거슬러 가면 지난 2015년 12월에 한일위안부합의로 타결되었던 위안부문제가 작년에 한국정부의 위안부합의 폐기로 원점으로 돌아간데 이어 강제징용 배상문제로 초계기 갈등마저 발생하면서 한일관계는 회복불능의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우려는 1월 15일 발표된 한국 국방부의 <2018 국방백서>에도 나타났는데 국방백서의 ‘한일국방교류협력’의 내용을 보며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규정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과거 국방백서의 표현이 삭제되었고 일본과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협력한다는 내용도 빠졌다. 직전의 ‘2016 국방백서’에서는 한일관계에 대해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로 규정한 바 있다. 미국 이외 주변국과의 군사교류협력을 기술하는 순서도 과거 국방백서는 한일, 한중, 한러의 순서였지만 이번에는 한중, 한일, 한러 순으로 변경됐다. 일본 외무성은 이미 2015년 3월의 외무성 홈페이지의 ‘최근의 일한관계’ 항목에서 일한관계는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종전의 내용을 단순히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대체한 바 있다. 결국 현재 한일 모두 자국의 정부백서에서 한일 간 ‘가치공유’ 관련 문구를 뺀 것이다.

2. 군사적 함의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동아시아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정책의 두 축이기 때문에 한일 간 군사 갈등은 미국으로서도 그냥 넘기기 어려운 사안이다. 따라서 한일 국방당국 간의 갈등과 대립이 이 정도까지 악화되면 미국에서 통상적으로 우려 표명이나 한일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중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야 정상이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내 언론들도 한일간 군사 갈등에 대해 별달리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물론 초계기 갈등에 있어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편을 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초계기 갈등이 진행되는 가운데도 발빠르게 이번 사태를 미국과 논의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 NHK방송은 초계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군사당국회의에 나선 것은 초계기 갈등이 한미일 3자 협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라고 보도했다. 미국을 방문했던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패트릭 새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대행과의 회담에서 한국 해군의 레이더 도발에 초점을 맞춘 표현인 '일한 레이더갈등'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피력하면서 그것이 한미일 안전보장 연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가와 이 가쓰유키 자민당 총재 외교특보도 미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초청 강연에서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다해주길 요청했다.

일본의 이같은 언급들이 주효했는지 한일간 갈등에 대해 침묵해왔던 미국은 1월 18일 존 리처드슨 미국 해군 참모총장을 통해 처음으로 '당사자 간 해결'을 주문했다. 당시 일본을 방문중이었던 리처드슨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자위대의 초계기 논란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로 차이가 있는 부분을 해결토록 힘써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리처드슨 총장의 언급은 한일 어느 한 국가의 입장을 든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요청에 따른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고무된 듯 이후 일본 정부는 자국 해상초계기의 레이더탐지 경보음을 공개할 방침을 한국 측에 발표하면서 다시 공세적인 입장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처럼 예기치 않은 해상에서의 한일의 군사조치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에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현재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을 위해 한미연합 훈련은 중단된 상태지만 반면에 미일연합훈련은 사상 최대로 진행되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축이 일본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일 양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을 펼쳤는데 그것은 1986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는 미일연합훈련(KEEN-SWORD) 훈련이다. 작년 10월에 있었던 미일연합훈련에는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을 포함한 미 7함대 및 미 5공군, 374항공수송단 등을 비롯하여 미 3해병원정군 등 미군과 일본 자위대 병력 총 5만 7000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였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캐나다와 영국의 해군 함정이 각각 2척이 훈련에 참가하면서 미·일·영·캐나다까지 중국에 대한 연합전선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본이 상호 군수지원 협장을 맺은 국가는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등 5개국인데 이는 서방국가들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일본은 2017년 11월에 '방위계획대강'에서 F-35 스텔스기 100대 추가 도입, 레이저 등 탄도미사일 요격무기 개발, 헬기 호위함의 항공모함 개조 등의 내용을 담아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2018년 방위백서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명기하면서 지상배치형 이지스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를 2023년에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이지스함에 배치할 차세대 레이더를 미국과 공동 개발할 계획도 갖고 있다. 자국 기업의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 탐지 거리가 현재의 500km보다 2배 먼 1천km 이상 범위의 레이더를 개발할 계획이다. 일본 방위성은 2024년 도입할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오에 한 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최신예 레이더인 LMSSR를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탑재되면 이지스 어쇼오 배치 예정지인 아키타현과 야마구치현에서 한 반도 전역과 중국까지 감시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국과의 협의로 진행되는 군사력 강화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미국 해군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있

다.

한편 2월 3일 해군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우리 군은 1995년 미국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사가 제조한 초계기 P-3C 8대를 도입해 운용하다가 대잠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2010년 기존 초계기를 개량한 P-3CK 8대를 추가해 현재 총 16대의 초계기가 우리 영해 900마일 해상을 지켜보고 있다. P-3의 항속거리(한 번 실은 연료로 비행 가능한 최대 거리)는 4,000여km, 최대 속도는 시속 750km, 최대 비행 고도는 10여km로, 공대함 미사일 하푼과 대잠 어뢰 등을 탑재할 수 있다. 반면에 일본 초계기의 주력 기종도 P-3 계열이다. 차이가 생기는 건 전력 규모인데 일본이 보유한 P-3 대수는 80여대로 우리의 다섯 배가 넘는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2007년부터 실전 배치한 최신에 대잠 초계기 P-1도 30여대가 있어 전체 초계기 보유 대수만 따져봐도 우리 해군의 7배가 넘는다. 게다가 P-3C나 P-3CK보다 성능이 월등한 기종이 P-1이다. 일본 방위성과 가와사키 중공업이 공동 개발한 P-1은 항속거리가 8,000여km에 이르고 최대 속도도 시속 1,000km에 육박한다(996km)하며 순항속도와 상승한도는 P-3C의 약 1.3배다. 일본은 앞으로 실전 배치된 P-1을 총 80여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국방예산을 늘리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해 서방과의 군사협력도 강화해 왔다. 2019년도 일본의 직접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5조엔(50조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 국방예산은 주일미군 오키나와 기지 주둔에 따른 주민보상비 등 국방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일본의 직접 국방예산 최고치는 1997년 4조 9천 412억엔이었는데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아베가 두번째 총리를 시작한 2012년에 편성한 2013년 국방예산부터 6년 연속 증가해 2017년에 4조 9천 388억엔에 달했다. 차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는 2천억엔을 넘는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인 이지스 오쇼어 2기 배치, 1발에 30억엔을 넘는 요격미사일 SM-3블록2A, 대당 1백 억 엔을 넘는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도 포함되어 있다.

3. 한일관계 악화와 우려되는 한국의 외교적 입지

현재 문재인정부에서 한일관계가 발전할 가능성은 낮고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진전이 어렵기 때문에 한미관계 보다는 미일관계가 더 밀접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핵문제 및 한미일 대북공조체제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과의 협력은 중요하다. 북핵문제 말고도 동북아 국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가는 현실에서 한일관계가 계속 냉각되고 상대적으로 미일동맹이 확대되면 한국은 동북아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

한일 양국은 서로 군사동맹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한미-미일동맹을 매개로 긴밀히 연계돼 있다. 주한미군의 운영체계도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미국·일본 간에 한미연합사 및 주일미군사령부를 통해 긴밀한 군사방위협력이 이뤄지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한반도의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서 일본과의 협력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초계기 논쟁과 갈등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은 한일 양국에게 좋지 않다.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적인 안보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관계뿐만 아니라 한일관계가 원활해야 한다.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나가는 것은 우리 외교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에 없다. 한일 양국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신중한 행보가 한국과 일본에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일본의 아베정권이 일본 자위대의 군사 역할 확대를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초 일본 해상 자위대는 미국 보급함의 '무기 등 방호' 임무를 위해 자위대의 최대 호위함인 이즈모를 투입했습니다. 이즈모가 수행한 군사 임무는 지바현 보소반도 앞바다에서 미 해군 보급함과 합류해 시코쿠까지 함께 항행하면서 미군 함정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군 보급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계와 감시에 나선 태평양사령부 군함에 대한 물자공급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즈모함이 수행한 '무기 등 방호' 임무는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인 이른바 '그레이존'(Gray zone) 상태에서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미군 등 외국 군대 함선을 보호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레이존 상태에서 무기를 사용한 보호임무를 하고 있을 경우, 실제로 상대가 미군을 공격하면 자위대도 공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는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반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이 가능한 세 가지 요건이란 일본과 밀접한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해당국의 명확한 요청이 있을 때입니다. 이 때문에 '무기 등 방호' 임무를 위해 자위대가 이즈모를 투입한 것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것은 현행 일본 헌법이 자위대에 인정하는 적의 공격에 대한 방어 차원의 공격인 전수방위 원칙을 깨트리는 임무입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역할 확대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비증강을 급속히 진행하고 있는 중국, 핵능력 고도화와 미사일 성능 향상에 매진하고 있는 북한의 함께 동북아에서 급속한 군비증강과 역내 국가들 간의 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군사 역할 확대는 다른 한편 군사대국화로 가는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미일동맹을 강화시키고 자국의 독자적인 군사 역할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일본의 행보를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군사 역할 확대와 자위대의 성격 변화에는 북한의 군사위협이 명분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98년 8월 북한이 대포동1호 미사일 발사실험을 한 이후부터 북한을 일본의 최대 안보위협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일본은 신방위대강, 미·일 가이드라인, 한반도 등 유사에 대비한 주변사태법 등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북한위협론'을 이용해 군사 역할을 확대시켜 왔습니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역할 확대는 일본 사회의 보수와 우경화에 의해 강화되는 것과 함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정당화에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는 우리에게도 미묘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면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의 반발이 커질 수 있고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한반도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도 한미동맹의 후방지원을 맡고 있는 미일동맹이 강화되는 것은 미국의 군사 활동과 연계되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군사 활동 확대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관여는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북한 지역과 관련된 군사 활동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역할 확대는 북한 핵문제와는 별도로 우리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MEMO>

[illegible]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서울시 중구 통일로 86 비비앙차 9층(순화동)

Tel : 02-741-7660~2

Fax : 02-741-7663

<http://www.cubs.or.kr>